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6. 8. 20~9. 20)

8. 22

노동부, 1997년부터 국내 기업의 임금 구조 개편 작업 착수

- 각종 수당과 임금 보전적 부가 급여를 단순화하도록 임금 구조를 개편
- 노사 자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, 노동 행정 규제 완화, 고객 지향의 노사 협상 관행 등 준수 가능한 노동 관계법 제정 착수

8. 23

재정경제원, 증권 시장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 대책 마련

-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자본금 1억 6,000만 달러인 KEF(코리아 유럽 펀드)에 대해 8,000만 달러 내에서 9월 중 증자 허용
- 시중 금리 안정을 위해 8월 28일과 9월 11일로 예정되었던 양곡관리기금채권(4,700억 원) 및 국채관리기금채권(3,650억 원)의 발행을 10월 이후로 연기

8. 26

재정경제원, 1997년 예산안 당정 협의

- 1997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(14.8%)보다 낮은(14%) 72조 원(재정투융자, 특별회계 포함) 규모로 편성
- 그러나 SOC 예산 규모는 올해(8조 2,000억 원)보다 25% 이상 확대 방침

8. 28

재정경제원, 소득세법 등 8 개 세법 개정안 마련, 1997년 시행

- 근로 소득자 면세점이 올해보다 100만 원 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,157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면제
-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 적자를 기록한 경우 전년도에 낸 법인세에서 이를 환급

8. 30

재정경제원, 「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」 마련

- 1997년부터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해 최고 2,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신설
-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완화 및 주주제안제도 도입

9. 2

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

-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을 120 일로 제한
- 정책 자금 대출 기간 연장(현행 3~10 년 → 15~20 년)

9. 3

재정경제원, 경제 종합 대책 발표

-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급 이상 공무원들의 1997년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, 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한자리수 안정을 적극 추진
- 1997년에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으로 2조 원을 공급하고, 벤처 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

9. 3

재정경제원,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발표

- 10월 1일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전체 투자 한도 확대(18% → 20%)와 함께 1인당 투자 한도도 확대(4% → 5%)
- 한전, 포철 등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 한도를 12%에서 15%로 높이되 1인당 투자 한도는 현행 1%를 유지

9. 5

한국은행, 추석 자금 5조 원 공급 계획

-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추석 자금을 1995년 3조 7,600억 원보다 증가한 5조 원 계획
- 향후 통화 관리를 통화 환수없이 신속적으로 운용할 방침

9. 6

재정경제원·금융연구원, 「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방안」 마련

- 1997년부터 은행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나 경영위원회가 도입되어 은행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
-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이 은행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 가능

9. 11

재정경제원, 비과세저축 소금융 기관에 허용

- 10월부터 판매 예정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일반 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소금융 기관에 허용할 방침
- 이와 함께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저축하는 자유적립방식의 가계장기저축상품도 추가 허용 방침